

5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812.05 (+41.21)		756.23 (+6.02)
	금리 (국고채 3년)		환율 (미·달러)
	2.412 (-0.002)		1356.50 (-13.00)

세계시장 연 32% 성장
‘사이버 보험’
국내 본격 확산
08



새 정부와 정책 호흡... 재계, 하반기 전략점검 나섰다

이젠 **이재명 시대**, 진짜 대한민국
〈관련기사 2~6면〉

경제회복 ‘비상경제대응 TF’ 가동
반도체·배터리 등에 집중투자 예상
SK 13일, 삼성 17일 경영전략회의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기조 변화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주요 그룹들이 일제히 하반기 전략 점검에 돌입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며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함에 따라 반도체와 자동차, 에너지, 배터리 기업들은 다양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 산업의 큰 방향을 수립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기술 기반 산업부터 자동차, 조선, 방위산업 등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전략 산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기업들은 새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 앞으로 5년 간 투자 계획도 새롭게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SK그룹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주요 그룹 및 대기업들은 속속 기획 및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SK그룹은 13, 14일 경영전략회의(옛 확대경영회의)를 열어 계열사 구조조정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계획을

논의한다.

삼성전자는 이달 중 주요 경영진과 해외법인장 등이 참석하는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열어 지역별 현안을 다룬다. 이번 회의는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 직무대행과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이 각각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에는 모바일경험(MX)사업부(스마트폰), 18일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사업부, 19일 전자순으로 회의를 열어 상반기 영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전략을 논의한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은 오는 18일 회의를 갖는다.

특히 삼성과 SK는 반도체 분야에서 정부 정책과 호흡을 맞추기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주요 대선 공약으로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국내 생산 세액공제 10%·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민관 100조원 펀드 조성 통한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내놔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와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동반자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이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에 이어 2018년 3월 유료신문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취재경위를 자율 공시하는 ‘기사이력 공시제도’를 국내 언론사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모바일, 방송, 단말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경제 속보와 금융 정보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과 융합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년 역사의 메트로와 함께, ‘뉴 메트로 선언’ 10주년인 올해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② 경력 취재기자

■ 모집내용

1. 신입 취재기자
 - ①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
 - 3차 면접 (1차 실무면접 → 2차 최종면접)
 - ② 모집인원 : 0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5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2. 경력기자
 - ①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1차 실무면접 → 2차 최종면접)
 - ② 모집인원 : 00명
 - ③ 주요 모집부문
 - 산업, IT 및 경제분야(금융, 증권)
 - (상기 모집 부문 이외에도 메트로와 함께 미래를 개척할 진취적인 분은 지원 가능)

〈2면에 계속〉

metro[®]

M-커버스토리

입법·행정 거머쥐어... ‘속도’ 보다 ‘신중함’ 기해야

의석수 170석 ‘거대 여당’

법사위·운영위 위원장까지 독식
정책 추진에 시너지 효과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손에 넣으며 거대 여당으로 변신해 정책 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

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쟁점 법안 추진과 관련 ‘속도’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기사 4면〉 21대 대선 당일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총 299석 중 170석으로 단독 과반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까지 합치면 189석으로 전례 없

이 규모가 큰 여권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와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까지 독식했고 다수의 특검법, 당론 법안들을 여당의 반대에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재의결 지지선을 확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정권 방어에 급급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 총선인 2028년까지 여대야소 상황의 이점을 누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요 입법 추진 속도를 두고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 줄타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4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5년간 250만 가구... 부동산 정책 ‘공급확대’ 방점

李 정부, 연평균 50만호 지원 공약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재생 초점
부동산 세제·규제 관련 ‘신중’ 계획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에 정책 기조를 둔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년간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다만 대선전에서 언급한 4기 신도시 개발의 실제 추진은 불분명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6·3 대선 공약으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비 지원을 내걸었다. 임기 내 250만 가구를 공약으로 밝혔으니 연평균 50만호를 신규로 지원한다는 얘기다.

취약계층에는 국비를 통한 주거비용을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전세자금의 이자 보전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임차인 보호를 적극 추진한다.

또 1기 신도시 등의 노후도시 재생에 초점을 두겠다고 했다. 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등 5곳뿐 아니라 용인·수원·안산 등의 재정비도 추진한다는 계획

이다.

아울러 4기 신도시 개발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에 앞선 3기 신도시 개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4기 대상지 지정 등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4기 추진 여부에 대해 정책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부동산 세제 및 규제와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종부세를 현행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한다. 이같이 추가

규제를 최소화하고 공급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신흥 부부 및 청년 대상의 주택공급 활성화는 이어간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제재의 성격의 짙은 조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집값 불안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붙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수도권 다수 지역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엿볼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이준석 제명하라” 청원 쏟아져 ...5일만에 36만명 돌파 /사진 뉴시스
▲“김건희 믿고 안하무인” 대통령실 ‘퇴사 브이로그’女직원은 사진사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에서도 쓴다 ...참여기업 추가 공모
▲보훈부, 취약계층 유공자 집중 지원 ...폭염 등 피해 예방

▲홍준표 “사익만 추구하는 사이버 보수정당은 청산돼야”
▲행안부, ‘경찰국 존폐’속 조직개편 지원 ...장관 인선 관심 쏠려